

중국의 대북지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김현정* 동아대학교 · 박선희** 동아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대북지원에 주목하고서 대북지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 본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대북지원이 대한 대내외적 상황에 접근하였다.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결정요인은 국외요인, 국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중국의 패권강화, 미국 견제, 중국의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 수행, 북한의 자원 확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중국의 사회주의정치체제 정당성 유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 등이 있다. 해당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대북지원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북지원이 중단되거나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주제어 : 중국, 북한, 대북제재, 대북지원, 양면게임이론

I. 서론

국제사회는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16년 4월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 대해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표명하였으며, 이는 북한을 압박하는 대북제재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 이전에 실시되었던 대북제재 결의안들은 큰 제재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695호(2006), 1781호(2006), 1874호(2009), 2094호(2013)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미사일 도발 등 군사력 확장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상호 간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북한에게 중국은 북한체제유지를 정치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국가이고, 경제적으로 최대 지원국이자 최대 교역투자국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공산주의체제 국가로서 중국의 사회주의정치체제 유지에 중요한 존재이며, 동아시아지역의 중국패권 확장에서 미국의 견제를 억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의 역할을 위해 대북지원을 봉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유지와 자원 확보를 위해 북한과 협력하고 지원을 실시하는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게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자 투자지원국이다. 2000년대부터 급증한 북·중간 경제교류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제재의 경우 제재대상국의 최대교역상대국이 제재대상국에 대한 강압적인 행동을 지지하고 무역거래를 감소시키면 제재의 효과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제재대상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 제재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제제재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Mclean and Whang 2010, 444-445). 맥클레인과 황(Mclean and Whang 2010)은 “기본적으로 국제공조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제재의 성공률은 높아진다는 입장은 견지하면서 제재대상국의 주요무역국이 만일 제재국에게 협조하면 제재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반면 제재대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제재의 성공률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Mclean and Whang 2010; 양운철·하상섭 2012, 149).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중국이 비협조적이거나 협조적이지만 북한의 비공식적인 지원국으로서 존재한다면 제재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때문에 북한의 최대교역대상국이자 투자국인 중국의 입장변화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정책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다.¹⁾ 미국의 대북제재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선(先)대화, 후(後)제재의 태도를 지속해왔으며, 대북정책에서도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여 대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을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교류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서 제재와 지원을 결정짓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지원 과정을 통해 중국의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설명하고 이러한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중국의 대북태도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제재와 지원이 병존하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는 기존의 국제관계이론으로 설명하기에 복잡하고 불규칙적이며, 국내적 요인이나 국제적 요인 중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의 양면게임이론

1) “王毅部長同美國國務卿克里舉行會談 并共同會見記者.” 2016/01/29, 中央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guowuyuan/vom/2016-01/29/content_5037055.htm (최종검색일: 2017/04/26)

(Two-level game theory)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중국의 대내외적 상황에 접근한다.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상호작용한다는 이론적 전제 없이 오로지 국내적 요인 분석이나 국제적 요인 분석만으로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설명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정책결정은 정부의 정책결정행위자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으며 정부 이외 기타 사회집단들을 포함한 국내행위자들의 협상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정책결정은 국내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지원정책은 국내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양면게임이론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 국가 간 힘의 분배 상태나 국제제도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이론들은 중국의 이중적 대북정책 태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내외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양면게임이론이 보다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지원을 포함한 경제교류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협상의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 대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내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양면게임이론의 분석틀을 통해 연구한다.

중국의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북지원의 형태는 무상원조 이외에 투자와 무역으로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대외원조를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냉전시대에는 이념대립의 구조아래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패권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우호세력 구축을 위한 국가안보적 목적으로, 탈냉전시대에는 고도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자원 확보, 자국기업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변화하였다. 국가안보적, 정치외교적 전략에서 자국이익 추구를 위한 경제적 전략으로 변화한 것이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표면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표방하지만 OECD의 공적개발원조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원조기관을 통하지 않고 양국 간 직접 원조지원을 추진하고, 국제개발기구의 기준인 무상증여 25%를 포함하지 않으며, 상환 시 현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대외원조는 투자와 구상무역 등과 같은 무역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정확한 대외원조 통계를

가능하기 어렵다. 중국의 대북지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북지원은 무상 원조 외에 투자와 무역으로도 이루어지며 이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자국이익 추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경제적 차원에서는 에너지 공급원의 다각화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자원 확보의 대북투자가 있으며, 정치적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북지원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미국이 아시아회귀 전략(pivot to Asia)을 시행함으로써 인해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져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체제유지와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최우선적 목표를 중국과의 관계설정으로 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성장 이전의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설정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협상을 추진하였지만 중국의 성장과 미국으로의 도전은 북한에게 중국과의 관계설정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미국보다 중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행보를 보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받길 원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표방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보여진다(전재성 2002, 3). 반면 중국은 북한에게 자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표방한 상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국제사회에서 실시한 대북제재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대북지원을 통해 얻게 되는 정치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위해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들의 선호와 전략을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라는 갈등보다는 협력에 더 큰 의미를 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지원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지원을 결정하는 국내외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이중

적 자세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장에서 양면게임이론의 윈셋(win-set) 개념을 적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또한 중국식 대외원조 모델의 목적과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대북지원에 대한 의미와 형식에 대해 파악한다. 3장에서는 대북지원의 형태를 원조, 교역, 투자로 분류하여 중국의 대북지원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4장에서는 중국의 대북지원 원인을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분석함으로써 대북지원 결정요인에 대해 알아본다. 5장에서는 제재와 지원이라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규명한다.

II.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양면게임이론 적용

퍼트넘의 양면게임이론에 따르면 국간 간의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과 배신의 과정은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자발적 배신(voluntary defection)과 비자발적 배신(involuntary defection)이 때문이다. 비자발적 배신은 국가라는 협상자의 의지가 아니라 국내적 선호와 집단의 지지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협상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내적 요인을 영향을 말하는 것이다. 퍼트넘의 양면게임이론은 협상과정에서 국제적 요인만을 고려하여서는 협상의 중단과 지속이라는 이중적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인식하고 국내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이중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윈셋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윈셋은 국내 비준(Level II)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제적 합의(Level I)의 집합으로 윈셋이 커질수록 협상비준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고 윈셋이 작을수록 협상비준의 성공가능성이 낮아진다(Putnam 1988, 437-438). 즉, 윈셋은 양측이 동시에 중복되는 교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교집합이 클수록 협상비준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윈셋의 크기는 협상의 성공여부에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대북지원에 이 윈셋의 개념을 적용하면, 국내 비준을 받을 수 있는 대북지원의 합의라는 윈셋이 클수록 중국의 대북

지원의 확대되고 협력이 활성화되고, 원셋이 작을수록 대북지원이 축소되거나 제재가 일어나게 된다. 때문에 중국의 대북지원에서 원셋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퍼트넘은 원셋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국내 여러 집단의 이해 및 연합관계(Level II preferences and coalitions), 국내의 정치적 제도(Level II institutions), 국제 교섭담당자의 전략(Level I negotiators' strategies)으로 제시하고 있다(Putnam 1988; 김정수 2004, 97). 국내 이익집단의 호응과 반발의 차이에 따라 원셋의 크기가 달라진다. 만약 국내 이익집단의 호응이 크거나 큰 영향을 받지 않아 관심이 없을 경우 협상이나 비준에 대해 지지하거나 의견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원셋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이익집단의 반대나 반발이 클 경우 원셋의 크기는 작아진다. 국내의 정치적 제도 역시 국회나 의회의 비준부결 등 절차 과정을 무난히 거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이익집단과 정치집단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힘이 더 강한 강성국가나 권위주의적 국가일수록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셋의 크기는 커진다. 국제 교섭담당자의 전략은 협상자가 상대방에게 다양한 제안들을 제공함으로써 원셋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전략을 말한다.

<표 1> 중국의 국내외 원셋 크기와 대북지원

		국내 요인	
		큼	작음
국외요인	큼	· 가장 협력적 지원 진행 · 국가 간 경제교류 확대 · 비공식적 교류 확대	· 온건한 지원 진행 · 국가 간 경제교류 축소 · 비공식적 교류 축소
	작음	· 온건한 지원 진행 · 국가 간 경제교류 축소 · 비공식적 교류 확대	· 가장 갈등적 · 국가 간 경제교류 결렬 및 갈등 · 비공식적 교류 축소

출처 : 저자 작성

원셋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국내의 요인이 국외적 요인보다 상대적으

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의 선호와 이익집단의 호응이 원셋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익집단의 존재보다는 국가발전을 위한 선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자국의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지지, 지속발전 가능한 동력확보를 위한 자원 외교, 저렴한 노동력 확보 등 자국에 대한 다양한 정치경제학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국이이익추구의 대북지원이라는 국내 원셋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대북지원에 대한 국외 원셋은 미국에 대한 견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은 중국의 동아시아 주도권 장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정권유지와 안정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인은 한반도 문제해결에서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국내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셋의 크기가 작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국내의 선호와 이익집단의 지지강도가 국가의 힘에 비해 크지 않으나 북한을 상대로 한 중국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의 크기, 다시 말해 자국의 선호와 집단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강력한 흐름 속에서도 북한을 향한 ‘비자발적 지원(involuntary cooperation)’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라는 협상가가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자 하여도 국내적 요인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지원(원조, 투자,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양면게임이론의 원셋의 개념을 적용하여 중국의 대북지원을 결정하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들을 분석하였을 때 국내외적 요인의 두 원셋의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국내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공산주의 일당체제로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자율성이 큰 강성국가이고 권위주의의 국가이다. 때문에 국내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이나 반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원셋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북지원 결정요인은 국내적 요인이 더 큰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더욱 강력한 국제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양면게임이론의 윈셋 개념을 적용한 중국의 대북지원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3장과 4장에서는 대북지원 현황과 국내, 국제적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Ⅲ. 중국의 대북지원 특징과 변화

1. 중국의 대북원조 특징과 변화

중국의 대북원조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남영숙 2009, 59).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시기, 1979년 개혁개방 시기, 1995년 이후 경제성장 시기이다. 첫 번째 시기의 중국은 냉전의 국제사회에서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한 일방향적인 원조를 시행하였고 대북원조 역시 사회주의체제 국가건설을 위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지원하였다. 두 번째 시기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외교의 목적으로 양방향적인 경제기술협력의 원조가 강조되었다. 세 번째 시기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는 시기로, 향후 미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할 수 있는 대외원조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수단과 방식이 다양화되어 무역과 투자가 결합한 경제협력 패키지 방식의 대외원조가 새로운 원조의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1994년에는 중국수출입은행이 설립되면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발판으로서의 차관을 활용한 대외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권율·박수경 2010, 19). 이 시기 중국의 대북지원도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말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대북투자와 교역의 규모가 확대되고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은 1949년 식량지원으로 대북원조를 시작한 이후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북한으로 노동기술력과 설비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식량지원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등 대북지원을 통해 매우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바뀐 중국은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로 불리는 중국식의 정부주도 시장경제 성장방식을 특징으로 대외원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성 원조였던 워싱턴 컨센서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원조체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권위적인 정부가 광범위한 시장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경제를 개혁하는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식 경제성장 모델로 제3세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대안모델로 발전 가능성을 평가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현정·박선화 2016, 237).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대는 중국이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원조를 활용한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대는 인도적 목적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들은 원조를 제공할 때 일반적으로 자국의 국익을 인도주의보다 더 우선하여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Lebovic 1988; Schraeder et al. 1998; Alesina and Dollar 2000; McGillivray 2003; 김상기 2015, 138),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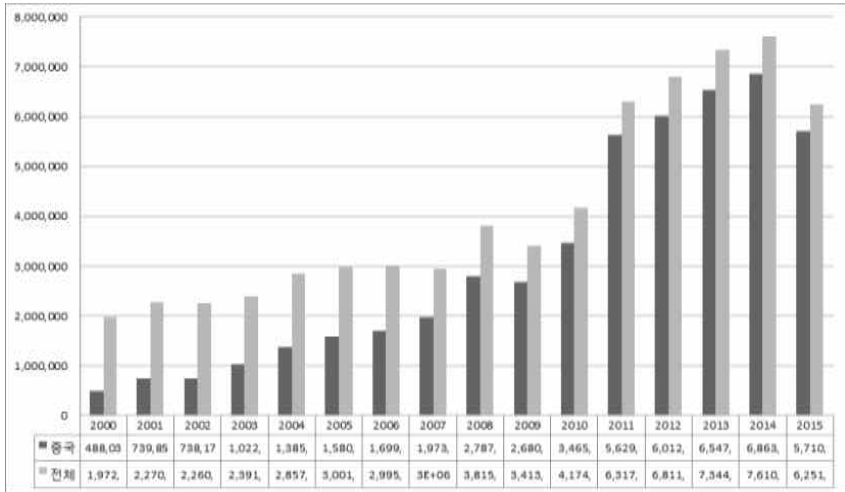
중국의 대외원조는 호혜주의와 내정불간섭, 상환 시 현물로 결제가 가능한 구상무역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대북원조에도 적용된다. 북한에 대한 원조가 북한의 정치적 선호를 변화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실증분석연구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또는 전략적 이익을 위해 대북지원을 실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자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이라는 북한의 대외원칙을 강조하며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된다(김상기 2015, 154). 때문에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강대국의 원조에 대해 북한은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중국의 대북교역 및 투자 특징과 변화

1990년대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효과로 고속성장을 달성하였고, 북한은 김일성 사망과 재해의 연속으로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은 양국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력갱생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론에 따른 북한경제는 중공업 우선발전전략을 시행하였지만 기형적인 산업경제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자원과 생산에서 가공, 소비로 이어지는 산업발전의 연결고리를 구축하지 못했다. 대량생산과 세계화의 시대에서 자급자족의 경제발전은 공업화 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 기술적 낙후 등으로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 경제적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고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더욱 커져갔다. 북한이 생존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자가 북·중 무역을 통해 유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림 1> 2001-2015 북-중 교역량 동향

(단위 : 천 달러, %)



출처 : 코트라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1-2015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중국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제1의 교역상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북·중 무역은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의 교역량을 살펴보면 중국과의 교역량이 24.7%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2015년에 91.34%로 비중이 확대되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국제연합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된 2006년, 2009년, 2013년에도 북·중 간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2015년 기준 ‘광물성 연료, 광물유’로 전체 수출금액의 약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류/부속품(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외)’, ‘철강 제조 화합물인 ‘광, 슬랙 및 회’, ‘철강’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 ‘광물성 연료, 광물유’에 대한 수출은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류/부속품(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외)’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이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 역시 2015년 기준으로 ‘광물성 연료, 광물유’이지만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점차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²⁾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였고 곡물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다. 대중국 수입은

1) <표 2>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단위 : 천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료, 광물유	1,149,077	1,205,576	1,389,837	1,146,386	1,057,042
광, 슬랙 및 회	405,710	357,508	415,292	339,349	204,662
의류/부속품(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외)	356,891	372,990	499,237	622,034	633,206
철강	154,797	124,606	94,787	89,598	52,996
전체	2,464,188	2,484,699	2,913,624	2,841,476	2,483,944

출처 : 코트라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2-2015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제작성.

2) <표 3> 북한의 대중 수입 품목,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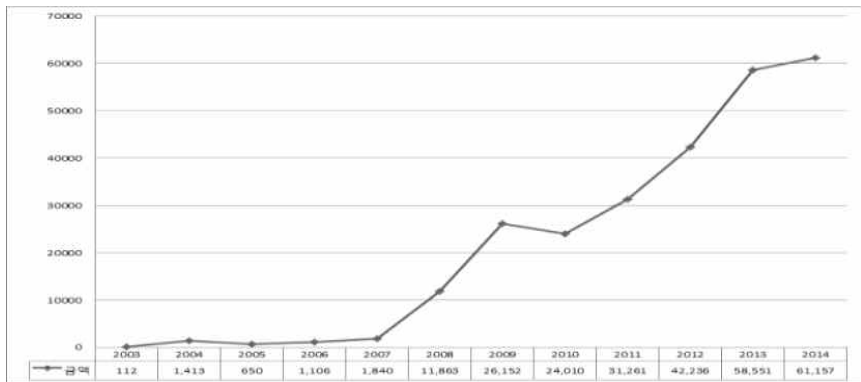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
광물성 연료, 광물유	771,038	789,983	740,578	691,431	427,29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277,320	292,695	263,163	310,260	252,094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품	251,460	266,914	253,916	419,769	332,361
차량 및 그 부품	220,577	232,651	239,726	210,517	196,189
곡물	102,344	129,887	61,033	43,406	13,863
철강	84,528	82,221	92,491	108,900	111,790
철강제품	58,902	62,595	100,773	71,383	62,585
전체	3,165,181	3,527,843	3,632,909	4,022,515	3,226,464

출처 : 코트라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2-2015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제작성.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북제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북제재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북·중 무역액을 대북제재 효과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지만, 기실 제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분야는 투자영역이다(림금숙 2016, 11).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0년대 중반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이후에도 그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에 투자금액의 증가폭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투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액(flow, 상무부 공식 통계)
(단위 : 만 달러)



주 : 2000-2002년은 투자액이 발표되지 않음

출처 :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2008-15년)을 바탕으로 임수호 외(2016)이 재정리

2000년대 중국의 대북투자의 특징은 광물투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의 대북투자기업은 총 155개 기업인데 그 중 광업투자가 65개 기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경공업 15개, 중공업·건설 14개, 식품·농업 14개, 화물 10개, 화학 8개, 무역 5개, IT 4개, 자동차 3개, 소매 3개, 첨단기술 2개, 전자 2개, 호텔 1개, 식당 1개, 관광 1개, 미상 7개 기업으로 나타났다(최수영 2013; 임

수호·김준영·홍석기 2016, 35). 광업투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7년과 2008년에 투자금액이 급증하였고,³⁾ 2000년부터 2001년의 중국의 대북투자금액에서도 광업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업투자금액은 전체금액의 약 81%를 차지한다. 이처럼 중국의 대북투자는 대부분 광업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상무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광업투자는 투자에 대한 통계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중간 경제교류는 대부분 생필품이나 자연자원에 집중되어있으며, 북한의 생산능력 저하로 대북 교역을 위해서는 북한의 자연자원 개발에 투자한 후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수입하는 교역의 투자화와 투자의 교역화라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다(金哲·徐文吉·于治賢 2015, 76). 소규모의 구상무역은 정부(상무부)의 비준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역이나 투자로 볼지 자원외교나 원조로 볼지는 여전히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 교역과 투자는 현재의 통계수치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최대 30%까지 중국의 대북투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임수호 외 2016, 25). 이것은 북한의 대중수입과 수출에서 ‘광물성 연료, 광물유’가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3) <표 4>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연도별 대북투자액, 단위: 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광업	-	-	-	88,727	7,284	21,145	10,697	2,591	1,387	-	131,831
경공업	-	-	-	-	-	83	52	-	-	1,750	1,885
중공업·건설	-	-	-	-	325	847	-	-	-	-	1,172
식품·농업	-	-	286	-	120	424	334	-	77	-	1,241
화물	-	-	-	15,713	12	725	-	540	-	-	16,990
화학	-	28	-	-	175	209	-	-	7,080	-	7,492
자동차	-	-	-	-	-	-	-	649	-	-	649
IT	65	-	-	-	-	-	-	-	-	-	65
철단기술	-	-	-	-	-	-	-	791	-	-	791
전자	-	-	-	-	35	-	-	-	-	-	35
식당	-	-	-	-	-	-	-	-	-	750	750
미상	-	-	-	32	-	-	-	-	-	-	32
계	65	28	286	104,472	7,951	23,433	11,083	4,571	8,544	2,500	162,933

1 : Open Source Center(OSC) Report 합영기업 기준
 주2 : 연도 미상인 경우는 제외하였음
 주3 : 누락된 산업분야 및 연도에는 공개된 투자액이 전무함
 출처: Open Source Center Report, "North Korea-Characteristics of Joint Ventures With Foreign Partners 2004-2011; 최수영 2013, 323; 임수호 외 2016, 35.

IV. 중국의 대북지원 결정요인 분석

1.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국제적 결정요인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탈냉전 속에서 여전히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호국이며,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국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힘의 분배상태가 변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더욱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희망하기 때문에 북한위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를 조정하기도 한다. 패권강화와 미국견제라는 목적이 중국의 대북지원을 유지하게 하거나 확대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대북지원 원셋을 커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원셋이 커질수록 북·중 간 가장 협력적인 지원이 진행되고, 국가 간 경제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제사회에서 주요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중국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이전같이 전략적 자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입장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강경한 대북제재의 목소리가 나올 경우 무작정 북한만을 보호하거나 옹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이라는 위치 수립과 유지를 위해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전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개념에서 정상적 국가관계로 북한에 대한 전략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교류나 대북지원이 원조와 국가기관의 합작개발 중심에서 지방정부나 민간기업의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강화와 이로 인한 강대국으로서의 책임감 부여는 중국의 대북지원 원셋을 작게 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원셋이 작을수록 중국의 온건한 대북지원이 진행되고, 국가 간 경제교류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자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강화와 미국견제는 대북지원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강화에 따른 책임감 있는 강대국 역할 부여는 대북지원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지원 결정요인은 국제적 요인만이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없다. 언급한 두 요인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 요인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의 대북지원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국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선호와 이익 등 국내적 요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국내적 결정요인

중국의 대북지원을 결정하는 국내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앞서 퍼트넘이 제시한 원셋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세 가지 중에서 ‘국내 여러 집단의 이해 및 연합관계’와 ‘국내의 정치적 제도’는 국내 차원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의 대북지원을 결정하는 국내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위 두 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용하여 그것이 변화에 따라 원셋이 변화함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국내 이익집단은 정치집단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국회나 의회의 비준절차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중국 내 이익집단의 선호와 이익이 대북지원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은 주로 생필품 원조와 광물자원의 교역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빠른 경제성장 이후 생산과 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된 중국에게 북한이 저렴한 가격으로 광물자원을 공급해주고 있었다. 때문에 중국내 원활한 성장과 생산 활동을 위해 북한의 자원공급은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 내 이익집단은 북한의 원활한 자원공급을 위해서 북한과의 안정적인

인 관계유지, 경제교류 확대를 지지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역과 투자를 포함한 중국의 대북지원이 향후 계속 유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국가의 힘이 더 강한 강성국가라고 할 수 있다. 강성국가나 권위주의적 국가일수록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이익집단의 반대나 반발이 줄어든다. 때문에 이를 통해 살펴보면 대북지원의 국내적 원색의 크기도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들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불안이 중국의 성공적인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경우 중국은 냉전체제의 마지막 잔재인 한반도 분단 상황, 일제 침략으로 야기된 과거사 청산문제, 양안문제, 영유권 문제 등 과거의 갈등요인과 새로운 갈등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지역안정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김영문 2000, 6).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예측 불가능한 문제국가로 남겨두기 보다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묶어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자국에게 긴요한 동북아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보다 능동적인 대북 정책에 나서고 있다(김영문 2000, 10). 이처럼 중국에게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 존재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강대국들을 견제하고 자국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사회주의정치체제를 따르고 있는 국가로서 자국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같은 해 10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평양을 방문하여 ‘해방 후 가장 큰 규모의 대북 경협’에 합의하였고”(김준형 2011), 양국은 북·중 접경지역에 황금평과 라선경제특구의 공동개발, 관리에 합의하였다(이승욱 2016, 130). 2013년 북한은 경제개발구법을 통해 기존의 경제개발특구(나선, 개성, 금강산,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등)를 총 25개의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 특구로 확대하여 외자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개발구 확대는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라진·선봉 특구는 중국의 경제특구를 따른 최초의 시도로, 김정은 체제에서의 구체적인 경제개혁 관련 조치들은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중국 개혁경험을 면밀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의 경제개혁은 중국의 성공경험을 모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북한의 경제관리체제와 경제활동은 이미 사회주의 원칙으로부터 많이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Gray and Lee 2015; 이승욱 2016, 135). 북한의 이러한 중국식 개혁개방 모방은 중국의 지원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인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은 주로 대외원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북지원 역시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대라는 목적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모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중국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조, 투자 등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는 대북지원의 국내적 원셋 크기를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동북아 지역의 불안해소와 중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의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과 성공적 추진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게 북한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의 체제안정을 위해 대북지원은 유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북지원의 국내적 원셋의 크기도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는 대북제재의 효과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서 중국은 적극적인 제재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지만 민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재의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를 나타냈고,

최종 합의안에서 북한의 석탄을 포함한 광물거래 금지에 대해 민생목적의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 대북제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국은 다른 국가, 특히 미국과 비교하여 제재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 북한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며, 중국에게 북한의 안정적인 체제유지는 매우 중요하기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불안이 심화되고, 북한체제붕괴라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경우 동북아시아의 안보불안이 심화되고 혼란이 증폭되는 등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불안과 붕괴를 바라지 않는 입장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북지원을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 양면게임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대내외적 상황에 접근하면 아래의 <표 5>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아래 <표 5>는 2장에서 제시한 <표 1>을 토대로 양면게임이론의 원셋 개념을 적용하여 중국의 국내외 원셋 크기와 대북지원의 결정요인을 정리·분석한 것이다.

<표 5> 중국의 국내외 원셋 크기와 대북지원 결정요인

		국내 요인	
		큼 (자원확보, 안정적 성장지속, 정치체제 정당성유지, 중국식 성장체제 확산)	작음 (해당사항 없음)
국외요인	큼 (패권강화, 미국견제)	·가장 협력적 지원 진행 ·국가 간 경제교류 확대 ·비공식적 교류 확대	·온건한 지원 진행 ·국가 간 경제교류 축소 ·비공식적 교류 축소
	작음 (책임있는 강대국)	·온건한 지원 진행 ·국가 간 경제교류 축소 ·비공식적 교류 확대	·가장 갈등적 ·국가 간 경제교류 결렬 및 갈등 ·비공식적 교류 축소

출처 : 저자 작성

국외요인에서 원셋 크기를 결정하는 대북지원 결정요인은 중국의 패권강화와 미국에 대한 견제, 중국의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 수행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중국의 패권강화와 미국에 대한 견제는 원샷을 크게 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의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 수행은 원샷을 작게 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요인에서 원샷 크기를 결정하는 대북지원 결정요인은 북한의 자원 확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정당성 유지, 중국식 경제성장체제인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원샷을 크게 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해 전망해 볼 때 향후 중국은 북한에게 협력적으로 지원을 진행되거나 온건한 지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식적인 국가 간 경제교류는 대외적으로는 축소될 수 있지만 비공식적인 교류는 유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중 간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거나 경제교류가 결렬되고, 비공식적인 교류 역시 축소되는 상황으로까지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중국의 대북지원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상황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대북지원이 중단되거나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율·박수경. 2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상기. 2015. “원조가 북한의 외교정책을 변화시키는가?: 유엔총회 투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5집 4호, 135-160.
- 김영문. 2000. “한·중 관계정상화 이후 중국의 대북한 정책.” 『대한정치학회보』 8집 2호, 247-273.
- 김정수. 2004.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양면게임 모델을 응용한 협상분석.” 『국제통상연구』 9집 1호, 95-122.
- 김준형. 2011. “남북관계 정상화, G2 시대 ‘평화전략’의 첫 단추” 프레시안 9월 12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7005>.
- 김현정·박선화. 2016. “중국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고찰과 변화전망.” 『중국법연구』 27집, 229-251.
- 남영숙. 2009. “신흥원조공여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 중국식 원조모델과 국제원조질서에서의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18집 4호, 37-64.
- 림금숙. 2016. “대북제재가 북·중경협에 미치는 영향.” 『수은 북한경제』 51집, 3-28.
- 양운철·하상섭. 2012.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강제성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의 확대.” 『통일정책연구』 21집 2호, 143-175.
- 이승욱. 2016.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영역화, 분권화,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집 1호, 122-142.
- 임수호·김준영·홍석기. 2016.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재성. 2002. “협상이론의 관점에서 본 남·북·미 3국간 관계.” 『국제지역연구』 11집 2호, 1-22.
- 최수영. 2013. “중국의 대북투자 실태분석.”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Alesina, Alberto and David Dollar.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33-63.
- Elena V. Mclean and Taehee Whang. 2010. "Friends or Foes? Major Trading Partners and the Success of Economic Sanc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4-2, 427-447.
- Kevin Gray and Jong-Woon Lee. 2015. "Following in China's footsteps? The political economy of North Korean reform." *The Pacific Review*. 51-73.
- Lebovic, James H. 1988. "National Interests and US Foreign Aid: The Carter and Reagan Years." *Journal of Peace Research*. 25-2, 115-135.
- McGillivray, M. 2003. "Aid Effectiveness and Selectivity: Intergrating Multiple Objectives into Aid Allocations." *DAC Journal*. 4-3, 27-40.
- Open Source Center Report. 2012. "North Korea-Characteristics of Joint Ventures With Foreign Partners 2004-2011" Open Source Center 1, March,

<https://info.publicintelligence.net/OSC-NorthKorea-ForeignJointVentures.pdf>.
- Robert D. Putnam. 1988.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 427-460.
- Schraeder, Peter J., Steven W. Hook, and Bruce Taylor. 1998. "Clarifying the Foreign Aid Puzzle: A Comparison of American, Japanese, French, and Swedish Aid Flows." *World Politics*. 50-2, 294-323.
- 金哲·徐文吉·于治賢. 2015. 『중·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6. "王毅部长同美国国务卿克里举行会谈 并共同会见记者" 中央政府门户网站 1月 29日, http://www.gov.cn/guowuyuan/vom/2016-01/29/content_5037055.htm

투고일 : 2018년 2월 13일 · 심사일 : 2018년 2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3월 8일

* 김현정은 동아대학교에서 국제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사이버안보 대응체제에 관한 민·관 인식의 격차”(『국가안보와 전략』 2017. 6),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형 모델”(『국제정치연구』 2016. 12) 등이 있다.

* 박선화는 동아대학교에서 국제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BK21플러스 총괄사업단 계약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 분석.”(『동북아연구』 2017년 9월), “The Impact of Labor-Management Relation Changes in China on China’s FDI Inflow” (『중국지식네트워크』 2017. 11) 등이 있다.

<Abstract>

Analysis of China's Aid to North Korea:

Focusing on The Two-level game theory

Kim, Hyun-Jung
(Dong-A University)

Park, Sunhwa
(Dong-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art from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of why the san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not indicate a great effect. In order to find answers to this question, this study focuses on China's aid to North Korea and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support for North Korea. Despite a tough international community'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hina has taken a dual stance on sanctions and support for North Korea. As for this dual attitude of China, this study approaches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the support to the North with the rationale for the Two-level game theory. China's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could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external factors and domestic factors. These factors include strengthening supremacy in China, checking the US, playing a responsible role in China, securing resources in North Korea, sustaining stable growth in China, maintaining the legitimacy of China's socialist political system, and spreading the Beijing consensu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factors, it could be expected that China's aid for North Korea will be official, informal, or continuous, and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North to stop supporting North Korea or deteriorating North Korea- China relations.

Key words : China, North Korea,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Aid for North Korea, Two-level game theory